

헌재,朴측 건강부회 주장... 곳곳 제동

대통령 측 "수사기록 국회서 유출" - 소추위원 측 "증거 대라"... 장광설 40여분 이어가다 헌재소장 등 제지받기도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과정에서 넘치는 주장을 펼치다 재판관들로부터 수차례 제지를 받았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기록을 국회가 외부로 유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거나, 헌재 수사 중인 박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광설을 이어갔다. 또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한 이유로 '너무 많다'는 답을 내놓았다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게 빈축을 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헌법재판과 관련된 녹음파일이 방송되거나 관련 자료가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회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을 지목하며 "누가 유출했는지 대충 의심이 간다"며 "조치를 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 측은 즉각 반박했다. 국회 측은 "우리가 자료를 유출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따졌고 박 대통령 측은 "찾아보겠다"며 답을 흐렸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각종 혐의를 부인하고, 촛불집회와 북한을 연결 짓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은 "국정 과정에서 최순실 등의 의견을 조금 참조한 부분은 있으나 조직적으로 관여한 적은 없다"면서 "직무권한 남용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섭고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이미지는 과거의 권력 남용 사례"라며 "박 정권 출범 이후 고의적으로 기업의 인허가를 방해하거나 기업의 활동



개혁보수신당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칭)개혁보수신당 중앙당 창당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발기인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을 위축시켰던 사례가 있으면 소추위원 측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다.

또 "속칭 태블릿PC 의혹을 확인해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게 강압 수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도 받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단독대를 세우고 민중총궐기가 주도한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측이 이 같은 주장을 40분 가까이 이어가자 박한철 헌재소장이 직접 나서 "충분하다. 앞으로 계속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1차로 제지를 했다.

이에 국회 측도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무슨 이유로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지 소

추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자꾸 진술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박 헌재소장이 "너 말씀하실 거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되 소추 사실에 관해서만 하라"고 했다.

이후 대리인단은 "형사법 위반 사실은 전문법칙 등 형사소송 절차 원칙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법칙이 적용되면 탄핵심판 사건 관련 증인들을 모두 법정에서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심리기간이 턱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증거조사를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절차는 형사 소송을 준용하지만 각종 고발 사건이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혼동해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이어 '핵심 증인들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 검토를 마쳤느냐'고 대리인단에게 질문했고, 대리인단은 "기록이 너무 많아서 아직 못했다"고 소명했다.

그러자 강 재판관은 "저는 이미 대략적으로 했다. 조금만 더 서둘러 달라"고 말해 시간끌기를 하는 박 대통령 측을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난 1차 변론에 이어 불출석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박 대통령 출석 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하며 심리를 이어갔다. /뉴스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대상"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인 문화계의 부당한 인사 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확인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특검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수사가 특검 수사대상인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특검법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특검 수사대상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을 보면 김종 전 문화부 차관들이 최순실 등을 위해 공무원을 불법 인사조치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돼 있다"며 "그와 관련해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조사하다 보니 인사조치가 단순히 이뤄진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된 것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자를 수사하다 보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관련 됐음을 알게 됐다"며 "특검법 제15조에 따라서 새롭게 인지해서 수사하게 됐기 때문에 현행법상 해석으로도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수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의 작성 또는 관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그간 진행한 압수 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상태다. 특검팀은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확인한 다음에 계획이다.

특검팀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씨 특혜 과정에 '잇선' 의혹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남 전 처장의 경우 수사 결과 상당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피의자로 소환했다"며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의 거듭되는 소환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최씨에 대해서는 재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 추가라도 체포영장 발부 부분은 향후 최순실씨 태도에 따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스

안희정 "철새정치는 한국정치 퇴행 주범"



안희정 충남지사는 5일 "철새정치는 한국정치를 퇴행시키는 주범"이라며 사실상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국민의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말한 뒤,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선거 때면 투표장에 나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유권자가 있다"며 "그런데 끝났으면 당을 버리고 나가는 정치인도 있다"고 비꼬았다.

안 지사는 앞서 "대선을 앞두고 명분 없는 이합집산이 거듭된다면 한국의 정당정치는 또다시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손 전 지사의 정계은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발언은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탈당파를 주축으로 창당한 국민의당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손 전 지사가 추진하는 국민주권개혁회의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 소속 손학규계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때문에 안 지사의 이날 발언이 탈당 움직임을 보이는 당내 손학규계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스

문재인 "경찰 수사권 독립-국정원 수사권 박탈 추진"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 제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경찰 수사권 독립과 국정원 수사권 박탈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권력기각 개혁 공약을 내놨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조약'에서 기초연설을 통해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시스템을 바로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하겠다"며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고 경찰 수사권 독립을 약속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국정원 개혁에 관해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한·해외, 안보·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며 "대공수사권의 경우 특

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정원 수사권 박탈을 예고했다.

문 전 대표는 청와대와 관련해선 "대통령 직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며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집무실을 정부서물청사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휴양지 '저도' 반환, 대통령 일과 24시간 공개, 인사추천 실명제 도입,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격하 등도 공약했다. /뉴스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마,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집중모금기간 2016.12.1~2017.1.31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